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인천○○○○○○○○호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로서 피청구인은 20○○. ○○. ○○. 인천광역시 택시화물과로부터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한 이 사건 화물차주가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연속 주유한 사실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물리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을 이유로 유가보조금 ○○,○○○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개월 지급정지(20○○. ○○. ○○. ~ 20○○. ○○.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보유한 화물복지카드 중 체크카드를 청구인의 ○○가입·출금 및 공과금 등 순수생활을 위해서만 사용하던 중 화물복지카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차량에 ○만원을 주유하게 된 점, ② ○○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정수급을 해본 적이 없는 점, ③ 운송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보조금마저 지급받지 못한다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선처해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식회사 ○○○○○○ 소속 인천○○○○○○○○호 차량의 위·수탁차주인 청구인은 20○○년 ○○월 ○○일 ○○분 내 주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에서 주유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되었으며, 인천시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가 통보되어 그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행위금지사항)에 해당되는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및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담당자교육(2019.11.) 책자 등에 의거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인정될 경우 유가보조금 제도가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29조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인천○○○○○○○○호 화물차에 대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이다.

2) 피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인천광역시 택시화물과로부터 다수의 유류구매 카드를 보유한 이 사건 화물차주가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연속 주유한 사실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3) 이에 피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해당 주유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이 사건 위반행위가 〇〇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했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물리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을 이유로 유가보조금 〇〇,〇〇〇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〇개월의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물리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을 이유로 유가보조금 〇〇,〇〇〇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〇개월 지급정지(20〇〇. 〇〇. 〇〇. ~ 20〇〇. 〇〇. 〇〇.) 처분을 하였다.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

경세, 자동차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에서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4조제3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면서 제5호에는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5에서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1차 위반 시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로 정하고 있다.

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9조는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로 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 · 부당여부를 살펴보면,

가)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연속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된바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〇〇가 화물복지카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차량에 〇만원을 주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건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발생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의성이 없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더하여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재원은 결국 조세에서 충당하는 것으로서 보조금을 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요구하는 절차나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제1항에서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3항에서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 ○○. ○○. 주유한 두 건의 거래에 대하여 각 ○○,○○○원 및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총 ○○,○○○원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았으나, 이 중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거래 건만이 환수처분 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유가보조금 ○개월 지급정지 처분에 있어 위법함은 보이지 않는다.

다) 다만,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위에 있어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소액인 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유가보조금 제도라는 공익적 필요성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